

‘조달 방식’이 관건… 국민연금 달러채, 환율 방파제 되나

대미 3500억달러 투자 입법시계

내달 9일까지 재원조달 틀 마련
달러조달 방식 환율 변수로 주목
국민연금 외화채, 완충장치 부상
환헤지·조달원 재설계 논의 본격

대(對)미 3500억달러 투자 약속을 뒷받침할 ‘대미투자특별법’이 9일 국회 특위 출범과 함께 본격 궤도에 오른다. 국민연금의 달러채(외화채) 발행 구상까지 맞물려 대규모 해외 집행이 달러 수급과 원·달러 환율에 주는 충격을 ‘조달 방식’으로 완충할 수 있을지가 거시 변수로 부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대미 투자펀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는 3월 9일까지 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안은 미국 산업에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재원 조달 틀(특별기금·펀드 조성)을 만드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조건과 맞물린 ‘통상 패키지’의 한 축으로 거론된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관련 합의문을 발표한 뒤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관전 포인트는 대미 투자 재원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떤 방식에 따라 달러로 전환·조달되느냐다. 투자 집행이 현물환 매수에 쏠릴 경우 단기 수급 불균형이 커

지며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연간 유출 한도와 장기 집행 구조, 초기 집행 규모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에 따라 충격이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의 ‘달러채 카드’가 완충 장치로 거론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방안을 검토 중으로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질수록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스라엘 복지부 1차관은 “올해 말까지 외화채 발행이 가능하길 희망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달러 조달 다변화 구상을 재확인했다. 한국은행 시각에서도 환율·수급의 무게가 확인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8일 홍콩에서 열린 대담에서 “당시 1480원 수준의 환율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와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정당화하기 어려웠다”고 언급했다.

그는 환율 급등의 국내 요인으로는 국민연금 해외투자 확대를 지목하며, “국민연금은 외환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참여자”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창용 총재는 국민연금이 올해 해외투자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한 점을 거론해 “최소 200억달러 이상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정부·한은·국민연금이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논의 중이며 이를 ‘뉴 프레임워크’라고 표현했다.

핵심은 ‘환헤지와 달러 조달원의 재설계’다. 이 총재는 국민연금의 환헤지 목표 비율이 0%인 점을 언급하며 헤지 비율을 일정 수준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외환스왑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헤지 수단과 달러 자금 조달원 확보를 주문했고, 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 “자산부채관리(ALM)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국회 특위가 특별펀드의 재원·집행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는지,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과 환헤지 규정 정비가 어느 속도로 진행되는지가 원화 변동성과 통화정책 환경을 함께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이창용 총재 역시 관련 방향이 “이르면 3~6개월 이내 정리될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달러 수급·환율 → 통화정책 선택지’ 연결고리가 정책 의제로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될지가 관건으로 꼽힌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대미투자특별법’ 내달 9일 전 처리 속도

관세협상 후속조치 입법 논의 본격화
한미 ‘전략적 투자’ MOU 이행 심사
특위 16명 구성… 여야 합의처리 원칙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 국회가 9일 대미 관세협상의 후속조치를 다루기 위해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재석 164인 중 찬성 160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과 관련한 법률안 심사를 위해 국회법 제44조에 따라 특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되며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도록 했다. 특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 총 16명으로 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했다. 여야는 이날 의결에 따라 이번주 내 특위 위원을 확정한다.

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맡기기로 했다. 대미투자특별법 소관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였던 만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해 11월 26일 여당이 제출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동명 법안이 계류돼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활동 기한인 내달 9일 이전에 여야 합의로 처리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위 구성안 통과 이후 모두발언을 통해 “한발씩 양보해서, 시급한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하자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대응적으로 수용해 준 양 교섭단체(민주당·국민의힘)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며 “한 달로 활동기한을 정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중대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어 가급적이면 2월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밀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국 정부에도 말씀드립니다”며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신속한 처리 의지를 갖고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양국의 오랜 동맹 관계는 상호 깊은 신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

김정관 “관세 인상없이 해결이 목표”

산업부 장관, 세종청사서 기자회견
대미투자특별법 3월 통과 유예 열쇠
상호관세 25% 위헌 여부 등 대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 발언 이후 양국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 등 상황에 따른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관세 협의와 관련해 “할 수만 있으면 관세 인상 없이 해결하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며 “(트럼프 행정부의)상호관세 25%의 위헌 여부를 포함해 모든 경우의수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비상 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관은 다만 “관보 게재 이후 상황도 상정해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시나리오에 관세 인상 자체를 막는 것이다. 김

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재인상을 언급한 배경으로 대미투자특별법 지연을 직접 지목했다”면서 “그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 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월 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여야 합의 상황을 미국 측에 지속 설명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미국의 관보 게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역시 ‘우리의 설명과 노력이 일정 부분 전달된 결과’로 해석했다. 김 장관은 “관보 게재는 3일에서 길어도 1주만 가능하지만, 이미 2주 이상 지연된 점은 여러 외교·통상적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미 특별법을 3월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러트닉은 굉장히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 상호관세 25%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나올 가능성도 정부가 고려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김 장관은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세 가지 경우를 나눠 내부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日 자민당 역대최대 ‘압승’… 재정확대 예고에 원·엔 동반 약세 우려

316석 확보, 다카이치 2기 출범
엔·달러 152→157엔, 엔저 가속
원·달러 단기 동반 상승 압력

지난 8일 치러진 일본 총선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창당 이래 최대의석을 확보한 가운데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일본은 한국과 산업구조가 유사해 수출 경쟁도가 높고, 원화는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자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적극적인 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약속한 만큼,

엔화가 약세 국면에 진입하며 원화도 동반 약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9일 NHK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은 지난 8일 치러진 총선의 원 총선에서 전체 의석 465석 가운데 316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이는 창당 이후 역대 최대 의석으로, 개헌안 발의 선인 310석도 상회한다. 연정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가 확보한 36석을 합산하면 총 352석을 확보했다. 이번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면이 해소된 만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23일 국무회의 이후 중의원을 해산하며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60~70%에 달하는 다카이치의 지지율에도 자민당과 유신회의 의석수가 233석으로 전체 의석의 절반을 간신히 넘겼던 만큼, 조기 총선을 통해 자민당 단독으로도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입법 및 정책 과제에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에서다.

이번 총선에서 일본 자민당은 ‘책임있는 적극 재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고, 주요 산업에 투자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소비세의 일시 감면 등 감세안도 포함됐다. 금융 완화로 주안점을 둔 1기 내각의 ‘사나에노믹스’ 정책의 연장이라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8일 자민당의 압승을 확인한 이후 “(정책 지속을 위해) 2기 내각에서도 현재 각료진을 모두 유임시키겠다”라면서 “소비세 감세와 급부부 세액공제를 논의할 국민회의를 가능한 빨리 소집해 속도를 내겠

다. 여기에 찬성하는 야당을 모두 규합해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며 목표를 재확인했다.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다카이치 내각의 주요 정책이 탄력을 받는다면 국내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일본과 한국은 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경쟁도가 높고, 원화도 기축통화인 엔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서다. 적극적인 완화책으로 단기 엔·달러 환율이 상승(엔화값 하락)한다면 원·달러 환율도 상승(원화값 하락)한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안승진 기자 asj1231@